



현안 자료 (2016. 11. 16)

백/해/무/익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발행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문의 : 02) 712-7292 spark946@hanmail.net

담당 : 조승현 평화군축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백해무익하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11월 14일 한국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였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재협상 개시를 발표하면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하였지만 우리 국민은 또 다시 기만당했다. 우리 국민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에 온갖 해악만 가져올 뿐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두 번에 나누어 살펴본다.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한마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불공정한 협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받을만한 정보는 전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귀중한 정보를 일본에 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정보자산이 한국보다 많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면 실익이 있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설사 일본이 정찰위성 등 한국에 비해 많은 정보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대북 정보력에 관한 한 일본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 가령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54초 뒤 탐지하고 추적하였지만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사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앞선 대북정보력은 "(일본 이지스함이나 FPS-5 등의)레이더가 수평선 아래는 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2016.9.29)라는 해상자위대 막료장의 말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대북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데도 효용성이 없다. 한반도는 중심이 매우 짧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5분이 걸리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이 북한의 대남 미사일발사 정보를 곧바로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 정보는 남한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데 시간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 글은 오마이 뉴스에 기고한 글이다. (2016. 11. 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1025&rcode=lvRc,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1103&PAGE_CD=N0002&CMPT_CD=M0112

일본의 잠수함 정보도 필요 없다

일부에서는 우리 해군의 대잠수함전 수행을 위해 일본의 대잠전작전본부(ASWOC)의 정보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은 구식이고 소형인 상어급 잠수함(300톤)이 주종을 이뤄 남한에 군사적 위협이 못된다. 또 남한은 이지스구축함, P-3C(18대운용), 링스헬기 등 대잠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일본의 대잠전작전본부의 정보해석능력을 이용하려면 한국 해군이 수집한 북한잠수함 정보를 고스란히 일본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해군의 대일 정보종속만 초래된다.

국방부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서 잠수함(SLBM)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모호"(국방부의 대국회 현안보고, 2016년 10월)하기 때문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편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은 우리 국민의 격렬한 반대를 무릎 쓰고 강행된,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문서로 폐기돼야 할 문서이지 보완되어야 할 문서가 아니다. 한미일 약정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진짜 의도가 한미일정보공유약정에서 설정된 모호한 한일관계를 확실한 동맹관계로 굳히기 위한데 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SLBM)은 디젤엔진으로서의 수중활동기간의 제한, 큰 소음, 운용능력의

미확보 때문에 앞으로 전략정찰(전략원잠이 공격대상 지점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해역에서 은밀히 행동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력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전력화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4척의 전략원잠을 보유한 중국조차도 아직까지 소음문제, 운용능력 부족, 탄도미사일개발 문제 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미국을 상대로 전략정찰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설사 북한의 잠수함(SLBM)이 실전화된다고 해도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 2500km를 넘기 때문에 남한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한반도 영역 안에서는 활동을 할 수 없는데다 북한의 잠수함(SLBM)은 실전배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북한의 어떤 잠수함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다. 즉 한국이 이용할 북한 잠수함 정보 자체가 해상자위대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대잠전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국용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만을 증폭시킨다

한국이 일본한테 받을 정보는 없지만 일본이 한국한테 받기를 바라는 정보는 무수히 많다. 그중에서 일본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인적수단을 통해 수집한 인간정보(휴민트)다. 휴민트는 일본이나 미국이 도저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정보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집대상국에 대한 의도, 동기, 선호성, 정책결정과정 등 미시적인 첩보를 수집하는 데 인간정보 이상 유효한 것은 없다."(¹문정인, <국가정보론>, 박영사, 39쪽) 이런 인간정보의 유용성에 비추어 보면 휴민트를 일본에 건네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한국이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를 기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일본이 북한에 관한 휴민트정보를 얻게 되면 이를 북한급변사태 유도 또는 북한 붕괴 공작에 이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즉 한일 정보당국 사이에 북한 붕괴를 위한 정보공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적기지공격론에 날개를 달아준다

일본은, 북한이 도교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표명을 하고 미사일 연료주입을 시작하거나 미사일을 세울 경우 무력공격 착수로 간주해(2015년 6월 29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 국회답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적기지공격론을 공언하고 있다.

대북 선제 공격의 결심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하다. 만약 정보가 틀리면 북한의 보

복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정보의 불투명함 때문에 집단자위권 행사나 대북 선제공격에 주저하던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군사정보를 입수하게 되면 대북 선제공격을 결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적기지공격론은 도발적이고 위험천만한 전략이며 전쟁(무력사용)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위반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런 불법적인 적(북한)기지공격론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의 거의 유일한 사례로 북한 또는 중국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를 든다.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군함 또는 미국 본토를 공격하면 일본은 이를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로 간주해 집단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편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려 할 때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경우라도 신무력행사 3원칙을 충족하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한 선제공격은 유엔헌장 제51조에서 인정되는 '집단자위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유엔헌장 2조에서 금지한 전쟁(무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불법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요격이 성공하려면

한국의 MD센서(이지스구축함의 레이더, 피스아이, 그린 파인레이더 등)가 탐지, 추적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가 필수적이다. 북한 미사일기지를 공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수집한 휴민트, 영상정보, 신호정보, 전자정보가 있다면 일본은 실패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불법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격이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터준다

일본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개정(2015년)과 안보법률의 제·개정(2015년)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평시에는 북한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군 등의 무기보호를 이유로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또 자위대는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간 전투 임박 또는 발생을 구실로 중요영향사태를 선언하고 미군이나 한국군에 대한 병참지원 또는 실종 미군수색구조, 주한 미국인 및 일본인 대피 등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주할 수 있다.

"현재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극히 한정된 범위만 다루고 있다"(한국일보, 2016년 10월 3일)는 마에다 일본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의 불만처럼 일본은 정보공유의 범위가 제한된 한미일정보공유약정으로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대북 정보를 다

각적이고 폭넓게 입수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든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일본은 주한 일본인 및 미국인 대피 등을 목적으로 자위대를 한반도로 파병할 때 현지 한국 당국으로부터 정보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때 자위대가 현지에서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양식으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능하게 된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불가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국방부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우리 정부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보장한다는 국민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 주장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밝힌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2015년 9월 23일 정호섭 해군총장은 "대북 억제차원에서 한미키리졸브연습에 일본도 참여해 연합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총리는 2015년 10월 14일 국회 답변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면 (자위대가) 입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5월 22일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함정 호위 같은

군사 활동 범위·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자위대와의 군사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부득이할 경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이제 한국정부의 동의 여부는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

더구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에게 사실상 결정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 때 작전적 필요성을 내세워 미국이 자위대의 진주를 요구하면 한국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심지어 일본은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2015년 10월 20일 한일국방장관회담 때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고 하면서 북한 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은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나 선제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하다. 일본의 정보는 우리에게 쓸모없다. 반면 우리가 일본에 건네는 정보는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을 부추기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보장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 준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일관계를 군사동

맹관계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통합MD를 구축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로 되면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돼 미국에 이어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의 훼손까지를 감수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주권과 독립, 평화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에 반하는 협정이다. 한미일정보공유약정도 애초에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일정보공유약정도 다 함께 폐기되어야 한다.

대북 적대적 성격이 뚜렷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금까지 한국이 32개나 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약정 포함)을 타국과 맺었지만 한일정보보호협정처럼 특정한 나라(북한)를 대놓고 그 나라에 관한 비밀군사정보를 주고받겠다고 공언한 전례가 없다. 그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갖는 대북 적대적 성격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에 적대적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북한의 군사정보를 비밀리에 주고 받게 되면 북한이 이를 자신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하더

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에 한일간 대북 비밀군사정보의 공유는 북한을 억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시키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남북 간 대결과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군사동맹의 출범을 의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을 공동의 적으로 보면서 대북 정보공조를 약속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군사동맹으로의 발전을 상정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이 동맹국과 체결하는 포괄적 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형식과 내용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군사교류적 성격이 강한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2007년 서명)을 한 두 조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베낀 것이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교환대상 정보의 등급으로 한일협정은 2~3급인데 미일협정은 1~3급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미일정보공유약정(2014년 체결)의 경우 교환대상정보의 등급이 1~3급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동맹을 한 차

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시킨 협정이다. 미일군사정보협정의 핵심은 '정보수령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서 해당 정보에 관계되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준수한다'(제6조 d)는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일이 SM-3Block II A(이 지스구축함이 탑재한 SM-3Block I의 성능개량형)와 같은 MD무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다. SM-3Block II A는 미국과 일본의 각각의 최첨단군사기술이 적용되는 무기이며 디코이(가짜탄두)대응능력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요격능력(사정거리 2000km와 요격고도 1000km) 개발을 목표로 한다. 미일은 사상 처음으로 최첨단 MD무기의 공동개발 및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미일동맹은 정보, 무기운용, 지휘통제 등 모든 면에서 통합된 MD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작전적 측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만든 협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제6조 라항)에도 '지식재산권' 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 조항 번호와 조문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미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지식재산권 조항과 똑같다. 그러면 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이 지식재산권보호조항이 들어갔을까?

미일외교국방장관(2+2)공동발표문(2011.6.21)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SM-3Block II A의 제3국 이전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국제평화 및 안전에 필요한

경우, 또 그 제3국이 SM-3Block II A의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을 갖고 있을 경우……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일이 공동개발 및 생산한 SM-3Block II A를 한국에 이전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한일이 무기를 공동개발 및 생산할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조항이다.

그러면 미일은 자신들이 개발한 최첨단 MD무기를 왜 한국에 이전하려 하는 것일까?

SM-3Block II A는 중국 및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주목적으로 한국의 대북한 방어수요를 넘는다. 결국 한국군을 중국견제세력으로, 미국 및 일본의 방위를 위한 군대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그 의도라 하겠다. 한국군이 미일이 개발생산한 최첨단 MD무기체계로 장비한다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무기운용까지도 미일 MD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군사동맹과 무관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러시아를 포함해 19개국과, 일본은 미국 등 6개국과 정보보호협정 체결로 동맹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다”(국방부의 대국회 보고내용)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여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 목적과 주고받는 정보의 성격, 정보보호수준이 크게 다르다. 한일 군사정

보보호협정은 단순히 군사교류에 머무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적대적 성격의 협정이다.

2012년 가서명된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의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라항은 “접수 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미일이 공동개발 및 생산한 SM-3Block II A나 F-35 등을 한국에 이전하는 법적 근거이자 한일 공동무기개발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조항으로 단순한 군사교류를 넘어 동맹수준의 높은 군사협력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또 ‘보충 이행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무기이전 또는 무기공동개발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보다 상세한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

반면 한호주, 한러 등 다른 정보보호협정 등은 특정국(북한)을 적대하는 협정이 아니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은 한러정보보호협정(2001년 서명) 등에는 없다. 한호주협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군사비밀정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축소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을 두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negative), 일반론적 원칙 표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수

형국은 제공국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적극적인(positive) 보호 원칙을 표명하여 보호수준이 높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음 차레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의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그 전단계에 머무는가를 가르는 금지선과 같다. 만약 이 금지선이 무너지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보장하는데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짝을 이루는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한일약사)의 체결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한일약사는 한반도 유사 때 한반도에 파병된 자위대가 한국군으로부터 군수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한국군에 대해 군수지원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군수는 정보 이상으로 전쟁수행에서 필수적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과 1996년에 미일약사를 체결하였다. 한일약사가 체결되면 일본이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군수지원이 가능해져 미국의 군수부담이 한결 가볍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도 한일약사체결을 강요해 왔다.

한국의 미일 통합MD 편입을 가져오게 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국은 북한 또는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을 향

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탐지·추적할 수 있다. 만약 일본이 이런 한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자동으로) 전달받게 된다면 미일 통합MD는 북한 또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정확성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통합MD가 이뤄지게 되면 미국은 북한 및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고 미국 절대우위의 군사패권질서를 구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한미일 통합MD를 구축하는 고리가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2014년 12월 서명) 하에서는 미국을 중개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한일간 직접적인 C4I(군의 전 자원을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율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전장 관리 체계)의 연동은 가능하지 않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AMD-cell(탄도탄작전 통제소)과 일본의 JADGE(자동화된 항공미사일방어통제소)간의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연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한일 사이에 개별적인 무기체계(이지스 구축함)의 연동도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사이도 MD통합의 길이 열리게 된다. 미일은 2012년부터 미일공동 미사일방어작전지휘본부(BJOCC)를 설치하는 등 통합MD를 가동 중이다. 따라서 한미일 MD는 가장 중요한 정보분야에서 MD통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정보분야의 MD 통합은 다음 단계인 지휘

통제의 통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의회조사국 보고서(2013.6)는 "미국과 동아시아동맹국 간의 정보공유는 필히 관련국가들의 지휘통제(C2)관계를 수정시키게 될 것이며 집단적 행동은 훨씬 더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누가 요격을 지휘할 것인가 즉, 미사일공격의 표적이 된 나라인가 아니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이런 목적으로 미리 설치된 특정 당국자인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쓰고 있다.

만약 한미일 사이에 MD가 통합운영되면 한국의 MD는 미일 MD의 하위체계로 필히 위치지어질 것이며, 한국의 MD자산(레이더, C2BMC, 요격기 및 발사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지휘 통제 하에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작전에 동원될 것이다. 미일통합 MD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한국의 MD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패권전략의 '전초기지'역할로 전략하게 된다.

중국견제를 노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의 한국배치가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듯이 한일정보보호협정도 겉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대응이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 동맹에 끌어들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고안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은 당초 '한국 경유로

중국에 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있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국방비 삭감의 필요성과 중국에 대한 대항의 필요로 오바마 정권은 방침을 전환하였다"(아사히 2012.11.9)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도 이전될 가능성이 있는 SM-3Block II A는 사정거리가 2000km이고 요격고도는 1000km에 이른다. 이는 대북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일본과 미국 본토, 괌, 하와이 등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서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무기라 할 수 있다. 또 F-35는 작전반경이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중국 공군을 견제할 수 있다. 즉 한일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을 중국견제세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 중에는 서해나 남해에서의 중국군함 또는 잠수함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 아사히신문은 "해상자위대는 '역사적인 배려'(자위대 관계자)로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서해에 군함을 기본적으로 파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서해의 한국해군의 협력이 있으면 중국 군함에 대한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아사히 2012.11.9)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목적과 성격이 중립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한중군사정보보

호협정은 북한이든 일본이든 제3국을 적으로 하는 정보보호협정이 될 수 없고 더욱이 중국의 현대무기들을 한국이 도입하거나 아니면 한국이 중국에 첨단군사기술을 이전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힘들다. 일단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비밀정보를 받게 되면 중국 정보에 대한 일본의 요구를 한국은 뿌리치기 어렵다. 일본은 한국이 중국정보를 주지 않으면 한국군이 원하는 정보(군사기술을 포함)를 한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3국 공군의 한반도 편대비행을 한국이 거부하자 일본은 한국공군의 일본 영공 통과를 불허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런 사례는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통해서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면 일본의 요구를 한국이 뿌리치는 것은 정말 어렵게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